

■ 열리는 이명박 시대

서민경제 살리기 '올인'

6대 생활비 거품 매년 530만원 절약

〈기름값·통신·고속도로 통행료·약값·사교육·보육비〉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기회있을 때마다 민생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당선자는 "정부 기구를 늘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지만 이 문제만큼은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라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서민경제 활성화를 다짐했다.

성장, 대기업 쪽에 편향된 것으로 비쳤던 자신의 경제정책에서 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민생경제도 중요한 정책목표 중 하나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 것이다.

이 당선자의 서민경제 정책의 핵심은 '민생경제 747'로 압축할 수 있다. 민생경제 747은 ▲중산층 50%에서 70%로 확대 ▲청년실업률 8%에서 4%로 축소 ▲주거비·의료비·실업·비정규직·사교육비·생활비·금융거래 소외 등 7가지 서민고통 해결 등 3대 정책목표를 담고 있다.

이 당선자의 거시경제 비전인 '대한민국 747(7% 경제성장,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 7대 강국)'을 민생경제 차원에서 보완하는 것이다.

민생경제 747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과제

취발유 등 유류세 10%내려 저소득층에 집중 지원

중산층 70% 확대 등 '747' 내세워 서민 고통 해결

▲일자리 창출과 청년실업 해소 ▲중소·벤처기업 육성 ▲자영업자·재래시장 살리기 ▲물가안정과 서민생활비 절감 ▲서민 주거 안정 ▲농어촌 살리기 ▲여성 경제활동 활성화 ▲비정규직 차별 해소 ▲서민금융 활성화 ▲사회적 약자 보호 등이다.

이 당선자의 민생경제 공약중 서민들이 가장 실감할 수 있는 부분은 생활비 30% 절감이다.

당선자는 공약을 통해 서민들의 기름값·통신비·고속도로 통행료·약값·사교육비·보육비 등 6대 생활비(4인 가구 기준 148만원)의 거품을 30% 제거해 월 44만원, 연간 530만원 이상 확 줄여주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서민생활 보호를 위해 유류 관련세를 10% 인하하겠다고 제시했다. 휘

발유·경유의 교통세와 등유에 붙는 특수세를 전체적으로 10% 내리되, 인화효과가 저소득층에 집중되도록 비우체 제도를 운영해 실질적으로는 20% 인화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택시와 장애인용 차량에서 쓰는 액화석유가스(LPG)의 특수세, 가정에서의 취사용·난방용 LPG와 도시가스의 특수세 등도 폐지하겠다고 했다.

통신비는 기본요금과 요금부과단위 조정 및 규제개혁으로 20% 이상 내리고 고속도로 통행료는 투자원금을 회수한 곳이나 요금 불합리하게 정해진 곳의 경우 재조정하며 출퇴근 고속도로 이용요금 50% 인하하겠다고 말했다.

사교육비 대책으로는 영어로 말하는 교사

와 원어민 교사 등 3천여 명을 확대 배치하고 기숙형 공립고 150개, 마이스터고 50개, 자율형 사립고 100개 등 학교의 다양화를 통해 공교육 정상화를 통해 절반을 절감하겠다고 밝혔다. 방과 후 예체능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도 사교육비 절감의 방법으로 제시했다.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카드 수수료율을 3~5%에서 1.5%로 인하하며 서민주택 대출이자율을 하향 안정화시킨다는 정책대안들도 내놨다.

거주목적의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등을 경감하고 재개발·재건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해 서민주택에 공급에 활용한다고 공약했다. 무주택 신혼부부에 연간 12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연간 60만개씩, 5년간 30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청년비정규직을 50% 축소하는 대신 정규직을 확대하는 한편 소기업 창업학교 설립 등을 통해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겠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연합뉴스



희망 담은 '행복트리'

SK텔레콤이 행복나눔재단과 함께 행복과 희망을 담은 메시지를 카드에 적어 크리스마스 트리에 다는 '2008 행복트리' 캠페인을 20일 서울 코엑스에서 시작했다. 참여 시민들이 1천원씩 내고 메시지를 다는 이번 행사 수익금은 결식아동과 소외 청소년들에게 도시락·양서를 전달하는 데 사용되며, 행사는 내년 1월 1일까지 진행된다. /연합뉴스

■ 서민금융 활성화 될까

■ 신혼부부 '내집 마련' 쉬워질까

■ 부동산시장 혼풍 부나

생계형 신불자 사면 기대

연간 12만가구 신규 할당

규제완화 기대감 부풀어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서민금융 활성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향후 서민금융 지원방안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당선자는 ▲생계형 신용불량자 신용 사면 ▲신용회복위원회를 '국민생활안정기금'으로 확대 개편 ▲은행·보험회사의 대부업 진출 자율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먼저 약 240만 명에 달하는 500만원 이하 금융채무 불이행자, 즉 신용불량자 및 신용취약자에 대한 '신용대사면'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신용불량자라는 낙인이 찍힌 이들이 취업이나 금융거래 등에서 각종 불이익을 받아왔는데, 신용을 회복하고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패자부활전'의 장을 마련해주겠다는 취지다.

신용을 회복한 채무자들은 금융기관에 진 빚을 차츰 갚아 나가되, 최악의 경우 이들이 빚을 갚지 못하더라도 채무보증을 선 국민생활안정기금 또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대신 갚아주기 때문에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돈 떼일 염려는 없다는 게 이 당선자 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러한 신용 대사면 조치는 '500만원 이하의 돈은 안 갚아도 된다'는 식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뿐 아니라 성실하게 빚을 갚으며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불공평한 조치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실제 추진과정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됨에 따라 신혼부부의 내집마련이 훨씬 수월해질 전망이다. 이 당선자가 연간 12만 가구의 신규주택을 신혼부부용으로 특별히 할당해 신혼부부들의 안정적인 보금자리로 제공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기 때문이다.

연간 신혼부부가 30만쌍 정도 되는 것을 고려하면 신혼부부의 40% 가량이 저렴한 가격에 빨리 주택을 마련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 당선자는 신혼부부들만 가입할 수 있는 별도의 청약통장을 만들어 이 통장에 가입한 사람들에게 우선 분양 또는 임대권을 줄 계획이다.

신혼부부 전용 청약저축에 가입한 사람들은 소득수준에 따라 하위계층은 복지주택을, 상위계층은 일반주택을 공급받게 된다. 연간 12만가구중 복지주택이 4만8천가구, 일반주택(공급면적 80㎡이하)이 7만2천가구이며 복지주택은 다시 임대(65㎡이하)와 분양(80㎡이하)으로 나뉘어진다.

복지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매월 5만원 이상을 납부해야 하며 일반주택을 분양받기 위해서는 10만원 이상을 저축해야 한다.

신혼부부용 청약통장에 가입했다고 해서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여성이 34세미만이고 무주택 세대이며 서울, 수도권, 광역시에 거주하는 세대라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여분이 있을 경우에 공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부동산 시장도 술렁거리고 있다. 이 당선자는 '시장경제론자'로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인위적인 규제 정책을 써온 참여정부와는 다른 정책기조를 펼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후보 시절 도심 응적들을 풀어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고 양도세·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금 인하를 주요 부동산 공약으로 내건 만큼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

이 후보의 당선에 확정 발표된 20일 서울 강남권 재건축 시장도 비교적 조용한 가운데도 응적들 인상 등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강남구 개포 주공단지, 송파 잠실 주공5단지 등 강남권의 주요 재건축 단지들은 이미 '이명박 후보의 BBK 의혹'에 대한 검찰 조사가 발표된 이달 초부터 급매물이 팔리거나 회수되고, 매도자들이 호가를 2천만~3천만원까지 높이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 집값 상승 등 부작용이 적은 뉴타운·재개발의 규제 완화 폭이 클 것이라는 예측도 가능하다.

앞으로 경부 대운하 개발이 시작된다면 대구·광주광역시, 충주시, 구미시, 경기도 여주군 등 운하 인근 지역도 후광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양도세·중매세 완화에 대한 기대감은 얼어붙었던 주택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하지만 새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미분양 아파트가 10만가구를 돌파한 상황이라 당장 부동산시장이 크게 활성화될 가능성은 낮다고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연합뉴스

■ 소강국면 접어 들었던 '금산분리'

급속 변화보다 단계적 완화

한동안 소강국면으로 접어들었던 금산분리 완화론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금산분리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전히 만만치 않고 삼성그룹의 비자금 의혹도 제기돼 있는 만큼 금산분리 원칙 폐기와 같은 급속한 변화보다 정부기관·연기금의 은행 인수를 허용해주는 식의 단계적인 완화론이 부각되고 있다.

2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이명박 당선자는 그동안 금산분리 정책을 단계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금산분리란 비금융주력자가 금융기관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4% 초과해서 보유할 수 없도록 제한한 원칙으로 대기업 등 산업자본이 자기자본이 아닌 고객예금으로 금융업계를 지배하는 것을 막기 위해 1982년 도입됐다.

이 당선자는 금산분리 원칙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외국자본이 국내은행을 지배하는 역차별이 심해지고 있다며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역설해왔다. 이 당선자는 금융업과 제조업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금융업이 생존할 수 있는 대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향후 10년 동안 금산분리 정책을 전향적인 시각에서 단계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삼성그룹 비자금 의혹이 불거진 상황에서 금산분리 완화를 반대하는 목소리 또한 만만치 않아 급속한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연합뉴스

부총리에 윤진식·강만수씨 거론

■ 경제 조타수 누가 맡을까

산자부 장관 최홍건씨 유력

경제부처 인적 쇄신도 예상되고 있다. 당선자는 선거기간 내내 "경제를 꼭 살리겠다"는 모토를 내세웠다.그만큼 어느 정부 초기보다도 경제를 직접 챙길 가능성이 높다.

경제부총리는 한나라당의 경제살리기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온 윤진식 전 산업자원부 장관과 재정경제원 차관을 지낸 강만수 일류국가비전위원회 정책조정실장이 유력한 후보로 꼽힌다. 두 사람은 당선자 캠프의 공약과 선거과정에 직접 편 인사들이라는 점이 이란 관측을 뒷받침한다.

국세청장은 법률로 정해진 임기가 없어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면 새 정장을 임명할 수 있다. 하지만 현 한 상물 정장이 지난 11월 30일 취임했고 현직 청장 구속이후 국세청 조직을 안정되게 이끌어오고 있다는 평가가 있어 교체 가능성이 낮다.

산자부장관의 경우 차관을 지낸 최홍건 전 중소기업



〈윤진식 전 산자부 장관〉 〈강만수 전 재경부 차관〉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이 당선자 캠프측과 교분이 있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정위의 경우 현 권오승 위원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할 경우 공정위 부위원장을 지낸 김병일 김&장 교문 등이 거론되고 있다.

농림부장관의 경우 이 당선자 캠프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농업업 부문 공약을 총괄한 윤석원 중앙대 산업경제학과 교수가 있다.

해양수산부 장관으로는 홍승용 전 인하대 총장과 박규석 한국수산회 회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연합뉴스

MB 효과 vs 해외 악재

코스피, 추당선 확정 첫날 17.10P ↓

"신정부 출범 기대와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간의 싸움이다"

20일 국내 증권사들이 17대 대통령 선거일 다음 날 내놓은 증시 전망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

성장 우선 전략과 친기업적인 정책을 내세운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당선에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지만 신용경색 위기와 인플레이션, 선진국 경기침체 등 글로벌 악재 역시 만만치 않다는 진단이다.

대선이후 첫 거래일인 이날 코스피지수는 직전 거래일(18일) 대비 17.10포인트(0.92%) 떨어진 1,844.37로 마감했고, 코스닥지수도 8.78포인트(1.24%) 하락한 700.69로 거래를 마쳤다. 신정부 출범 기대로 장 초반 상승세를 탔으나 외국인과 프로그램 매도 여파로 하락 마감했다.

국내 증권사들은 대체로 기업인 출신의 첫 대통령 탄생을 반기면서도 '이명박(MB) 효과'가 힘을 발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엇갈린 전망을 내놓고 있다.

MB 효과를 전망하는 측은 이 당선자의 7%대 경제성장 전략과 감세정책,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금산분리정책 재검토 등 친기업적인 공약이 주식시장에 우호적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회진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경제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증시의 환경이 녹록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반대측은 미국의 신용경색과 주택경기 하강 여파로 MB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글로벌 증시의 환경이 녹록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삼성증권은 민간기업 사장 출신인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당선은 분명 한국 경제에 긍정적이거나 지금의 증시 위험은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명박 랠리'를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영국계 HSBC, 외환銀 인수 신청

영국계 HSBC은행이 외환은행을 인수하기 위해 금융감독당국에 인가를 신청했다. 금융감독위원회 홍영만 홍보관 리관은 20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HSBC은행이 외환은행을 인수하기 위해 17일 외환은행 주식의 한도 초과 보유 승인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현행 은행법상 은행 지분을 10%(비금융주력자는 4%) 이상 취득할 경우 금

감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홍 관리관은 "금감위는 관련 법령상 요건과 현재 진행 중인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한 재판을 고려해 승인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2003년 외환은행 할값 매각 의혹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는 인수 승인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

윤용로 금감위 부위원장

신임 기업은행장에 내정

신임 기업은행장에 윤용로(53)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정부와 금융계에 따르면 정부는 인사추천위원회를 열어 행정공모에 단독 응모한 윤 부위원장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추천했으며 21일 재정경



제부를 통해 행정고시 21회로 재무부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으며 재정경제부 외화 자금과장과 은행제도과장, 금감위 공보관·감독정책2국장,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역임했다. /연합뉴스